

# 발포명령·암매장·헬기사격...5·18핵심 하나도 못 밝혔다

### 5·18조사위 활동 26일 종료... 보고서 작성 기간만 남아 지역민 기대 속 활동... 결국 4년간 허송세월만하다 마무리

4년 동안 활동해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발포명령·책임소재 확인'을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사위는 20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국가차원의 5·18 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조사위가 오는 26일 4년간의 공식 활동 임기를 마칠에 따라 조사현황과 이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조사위는 총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민간인 사망·상해 사건, 헬기 사격 사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의결할 예정이다.

신정사건에 대해서도 총 216건 중 43건을 심의 완료했으며, 80건은 직권사건과 병합했다. 45건은 각하, 48건은 취하했다.

조사위는 핵심 과제였던 발포 명령자와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에 대해서 신군부 수뇌부, 상부에서 발포 지시를 내렸다는 직접적 증거와 진술은 확

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발포 명령은 서면이나 군 기록의 자료가 남아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결국 진술 조사에 집중했으나, 군 관계자 중 직접적으로 진술한 이는 없었다"며 "신군부 수뇌부들만 발포 책임자라고 보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실탄 배분된데 대해 현장 지휘관, 개인 실행 병사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만 내렸으며,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헬기 사격 사실이 행사 재판 판결문 등에 적시돼 있긴 하나, 헬기 사격에 관여했을 조종사, 무장사, 정비사 등으로부터 스스로 헬기 사격을 인정한 진술을 얻지 못해 정황증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사위 설명이다.

암매장지와 관련, 계엄군이 지목한 21개 장소에서는 조사를 마치고 19기의 유해를 발굴했으나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서 이관받은 암매장 추정지 53곳 중에서는 발굴이 미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3곳 중 암매장 가능성이 낮거나 기존 발굴된 곳을 제외하고 25곳을 특정했으나, 3곳을 발굴하

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들 3곳의 암매장지에서는 아무 유해도 발굴되지 않았다.

또한 11월 30일 기준으로 무연고 유해와 행방불명자 가족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유전자가 일치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행방불명 가족들과 유전자를 비교 대조하는 과정은 관련 기관에 인계해 계속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사가 부실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급하게 보고서를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조사위 위원은 "조사 활동 종료까지 불과 6일 남은 시점에도 아직 위원들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이 많다"며 "위원들에게 충분히 심의를 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결과를 내는 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사위는 오는 26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고 내년 6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보고서 작성 전에는 대정부권고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 광주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5·18조사위 위원들의 임기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고서 의결을 위해 6개월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사무처 임기도 '위원회 활동종료 뒤 3개월 존속'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3개월간 존속'으로 변경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 사건 인사이트

### 초·중 자녀 3명 유기 친부 아동학대 무죄 왜?

#### 가출 친모 찾기위한 사정 고려

#### 광주지법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전남지역 초·중학교에 다니는 3명의 자녀를 광주의 편의점에 유기한 아버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가출한 배우자를 찾기 위한 친부의 사정을 고려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A(44)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자녀 3명을 두고 승용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이후 아이들은 인근 경찰서 지구대로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사정이 있었다.

A씨의 배우자이자 아이들의 모친인 B씨는 지난 2020년 9월 가출을 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수에 살던 A씨는 B씨를 찾기 위해 아이들을 태우고 B씨가 사는 광주로 왔다. A씨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아이들에게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초·중학생으로 모두 휴대전화를 소

지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사라지자 바로 연락을 했다. A씨는 "근처에 있을 테니까 경찰서로 가 엄마에게 연락하라"고 이야기 했고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2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했다.

경찰이 A씨에게 연락을 하자 A씨는 또 아이들의 인수를 거부하며 모친인 B씨에게 연락하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50여분 동안 B씨가 계속 나타나지 않아 A씨는 결국 경찰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A씨가 보호·감독을 해야 할 자녀를 유기해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흡)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유기하고 인수를 거부했지만 이는 모친을 지구대로 찾아오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아이들이 A씨와 연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이들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국가차원의 5·18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보훈부 "5·18부상자회 3월 18일 총회 무효... 11개 안전 재의결하라"

#### 황일봉 "회장 징계안도 무효" 주장

국가보훈부가 지난 3월 18일 열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총회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5·18부상자회는 지난 19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총회를 무효로 하고 이미 의결한 11개 안전에 대해 재의결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총회가 당시 구성원 179명 중 대의원 168명이 참석해 열렸는데, 대의원 전원이 지난 9월 15일 광주지방법원 대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해당 총회는 참석자 11명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정족수가 미달돼 총회가 무효라는 것이다.

황일봉 부상자 회장은 이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한 11개 안전 중 상벌운영규정 개정의 건이 무효

처리되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임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상벌위원회에 전달할 주제를 사무총장에서 조직국장으로 변경했다.

황 회장은 "부상자회장 징계 사유를 상벌위원회에 전달한 이는 조직국장인데, 여기에 기존 정관을 적용하면 상벌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무등록 학원원장 음주운전 걸리자 내연녀에 위증교사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던 50대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에 벌금까지 내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2020년 7월까지 광주시 남구에서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초·중·고등학교 대상 영어교습학원 두 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3월 31일 밤 9시 30분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내연녀 B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전화해 "새벽에 (나를) 만나 차를 운전해 주차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이후 정오까지 차안에 숨어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LH공사 감리 입찰 담합 수사 광주시 공무원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감리 입찰 담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주시청 공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일 광주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체육진흥과에 검찰수사관을 보내 압

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LH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설계·감리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과 관련, 담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연합뉴스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